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법률안
(이소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2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20.

발 의 자 : 이소영·오기형·위성곤
김동아·허영·박희승
조인철·염태영·복기왕
민병덕·정진욱·주철현
박지원·양부남·한창민
오세희·백승아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, 지난해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8)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함.

이미 캐나다, 스웨덴,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0%를 돌파한 반면, 우리나라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%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. 그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 실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한편,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목되고 있음.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100~1,0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, 태양광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합리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·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(안 제27조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2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3(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) ① 신

·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및 그 설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27조의3(신 · 재생에너지 설비</u> <u>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</u> <u>준) ① 신 · 재생에너지 설비를</u> <u>설치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</u> <u>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의 유지</u> <u>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</u> <u>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</u> <u>없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및</u> <u>그 설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</u> <u>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